



# IT & SOCIETY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방향**  
-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국을 중심으로

Vol5 2011. 8



#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방향

I. 서론 / 01

II. 국가별 정보화 거버넌스 현황과 추진방향 / 03

III.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의 특징과 시사점 / 26

작 성 : 김현경 책임 (한국정보화진흥원)

한영미 책임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진숙 책임 (한국정보화진흥원)

## 요약

### 1. 주요 국가별 정보화 추진체계 개요

- ◎ 1990년대 이후 IT 발달에 따라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는 '정보화'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유의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고객 지향적 대민 서비스와 정부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 ◎ 정보화 추진체계는 각 국가의 행정조직, 분권화, 국민의 수요 등 정치·경제·사회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

국가	정부형태	정보화추진체계
미국	· 대통령중심제 · 오바마대통령('09.1~)	· 대통령 리더십 하에 위원회의 기획과 정부 부처의 집행, 전문 및 민간과의 협력
일본	· 의원내각제 · 아키히토 천왕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09.9 ~)	· IT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 추진은 각 담당부처가 관계부처와 연계 하여 수행
중국	· 인민공화제 · 후진타오 국가주석('03.3~) · 원자바오 총리('03.3 ~)	· 공업신식화부 중심의 정보화 정책 및 전자 정부 업무 추진 - 대분업관제에 의해 방송과 통신 분리규제
싱가포르	· 내각책임제 · 리시엔룽 총리	· IDA를 중심으로 국가정보화 총괄과 전자정부 총괄 부처를 이원화하여 사업 추진
호주	· 영국식 의원내각제 · 케빈러드 총리('07.12~)	· 각 영역별 고유의 추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범국가적 협의·조정체계 마련
영국	· 의원내각제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10.5~)	· 1990년 정보화 추진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으나, IT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범부처적 추진체계로 재정비
독일	· 의원내각제 ·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10.7~) · 앙겔라 메르켈 총리('05.11~)	· 정책 총괄 거버넌스와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이원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능

## 2.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특성 및 시사점

### □ 국가경쟁력 제고 및 총체적 국가발전 도모를 위한 정보화 추진

- ◎ 각국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각각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추진 체계의 모습은 다르나, 정보화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총체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은 동일

#### - 국가정보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 국가 차원의 정보화 전략수립

※ 일본 IT전략본부의 'Japan 전략 2015', 싱가포르의 'Intelligent Nation 2015' 등

### □ 국정 최고책임자가 정보화를 국정과제로 인식 직접 관장

- ◎ 정보기술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장기전략과 단기행동계획을 대통령과 수상 등 국정최고책임자가 정보화를 국정의제로 인식하고 대통령부와 내각 사무처/내각관방 등을 통하여 직접 관장

### □ 전문성을 가진 정보화 전문기관이 중요역할 수행

- ◎ 싱가포르의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호주의 AGIMO(The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등 전문성을 가진 정보화 전문기관이 중요 역할 수행

#### - 전통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전문성 있는 별도 전문 기관 활용

### □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활용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개별부처에서 추진

- ◎ 초기 인프라나 하드웨어 중심의 범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에서 최근 임무영역 지원, 즉 부처별 서비스 개발과 운영 중심의 전문화된 정책 수립으로 진화
- 사회복지, 교육 등 대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발전
- 정보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성과관리방식 도모

### □ 정보화 거버넌스 협력·조정체계의 중요성 증대

- ◎ 단위부처 중심에서 여러 기관 및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 추진이 증가하면서 정보화 거버넌스는 협력, 조정체계가 핵심
- 정보화가 복지, 문화, 산업, 안전·재난 등 사회 모든 영역에 흡수, 융합됨으로서 여러 부처의 참여 및 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1. 서론

- ◎ 1990년대 이후 IT발달로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는 '정보화'를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로 선택
  - 정보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고객 지향적 대민 서비스와 정부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
  - 특히 전자정부는 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브로드밴드 구축, 신규서비스 발굴 등 지속적으로 IT산업 발전 도모
-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진화하는 정보기술을 이용, 정부의 대민 서비스는 물론, 경제·산업 발전과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유의 추진체계를 수립 운영
  - 선진 국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개발 도상 국가들도 IT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발전, 직업창출, 건전한 사회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
  - 이러한 국가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UNDESA, UNESCO, 세계은행, ITU, OECD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EU와 같은 지역연합 기구들은 주요 국가들의 성공사례와 개발경험을 발굴하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재정 자금을 발굴하여 후진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운용
- ◎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추진체제는 1980년대 이후 기술 환경과 사회적 수준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
  - 추진조직으로서 1987년 전산망조정위원회, 1995년 정보화추진위원회 (2009년 국가정보화전략위로 개편),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꾸준히 설치 운영되었고, 체신부, 정보통신부 이외에도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관여
  - 1986년 전산망법,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2001년 전자정부법 등이 제·개정되어 정부의 정보화활동을 지원하였고, 정보화촉진기금과 정부예산이 적절히 배정됨으로써 정보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 ◎ 정보화추진체계는 각 국가의 행정조직, 분권화, 국민의 수요 등 정치·경제·사회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
  - 또한 법제도, 예산관리, 정보자원관리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기술적 요소와 긴밀하게 연관
- ◎ 이하에서는 향후 국가정보화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주요국가의 정보화 추진체계 및 정책추진의 특성 및 시사점을 모색

**<조사대상 국가 개요>**

국가	인구 (2008)	면적	정부형태	1인당 GDP (2010, IMF 기준)
미국	304.1백만 명	9,827천km <sup>2</sup> (한반도 44.5배)	·대통령중심제 ·오바마대통령('09.1~)	4만 7,284\$
일본	127.7백만 명	37만 7,899km <sup>2</sup> (한반도 1.7배)	·의원내각제 ·아키히토 천왕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09.9 ~)	4만 2,820\$
중국	1,338백만 명	9,597천km <sup>2</sup> (한반도 43.4배)	·인민공화제 ·후진타오 국가주석('03.3 ~) ·원자바오 총리('03.3 ~)	4,382\$
싱가포르	4.8백만 명	682km <sup>2</sup> (한반도 1/330)	·내각책임제 ·리시엔룽 총리	4만 3,117\$
호주	21.4백만 명	7,682천km <sup>2</sup> (한반도 34.8배)	·영국식 의원내각제 ·케빈러드 총리('07.12~)	5만 5,590\$
영국	61.4백만 명	24만 829km <sup>2</sup>	·의원내각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10.5 ~)	3만 6,120\$
독일	82.1백만 명	35만 7,023km <sup>2</sup> (한반도 1.5배)	·의원내각제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10.7~) ·앙겔라 메르켈 총리('05.11~)	4만 6,31\$



## 2. 국가별 정보화 거버넌스 현황 및 추진 방향

### 1. 미국

□ 대통령 리더십 하에 위원회의 기획과 정부부처의 집행, 전문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화 추진

◎ 범정부 총괄조정기구의 구성(IITF)에서 정보화관련 자문위와 OMB 중심으로 정보화 추진조직 형성, 이후 국민소통참여 채널 확보로 발전

— (클린턴 정부) 부처별로 추진된 정보화 관련조직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범정부적 총괄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작업단 (IIT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구성

※ IITF는 상무부(DOC) 산하의 정보통신청(NTIA)과 기술표준국(NIST), 예산관리국(OMB)의 정보화 관련 역할을 연계하고 민간자문회를 설치하여 민관협력의 국가정보화를 추진

— (부시 정부) 전자정부 및 정보화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부여

— (오바마 정부) OMB 중심의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되, '열린 정부'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문제 해결, 국가 차원의 과제에 있어서 개방과 참여를 통해 수행

◎ 관리예산처(OMB)는 범부처 수준의 정보화 전담기구로서 예산권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기획, 통합, 조정의 업무를 담당

— 정책은 OMB에 의해 기획과 예산을 연계를 통해 통제되며 개별부처의 독립적 IT 사업은 연방 CIO협의회에 의해 거시적으로 통합

※ 연방정부의 정보화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OMB 공무원이 연방 CIO 위원회 조직의 구성원으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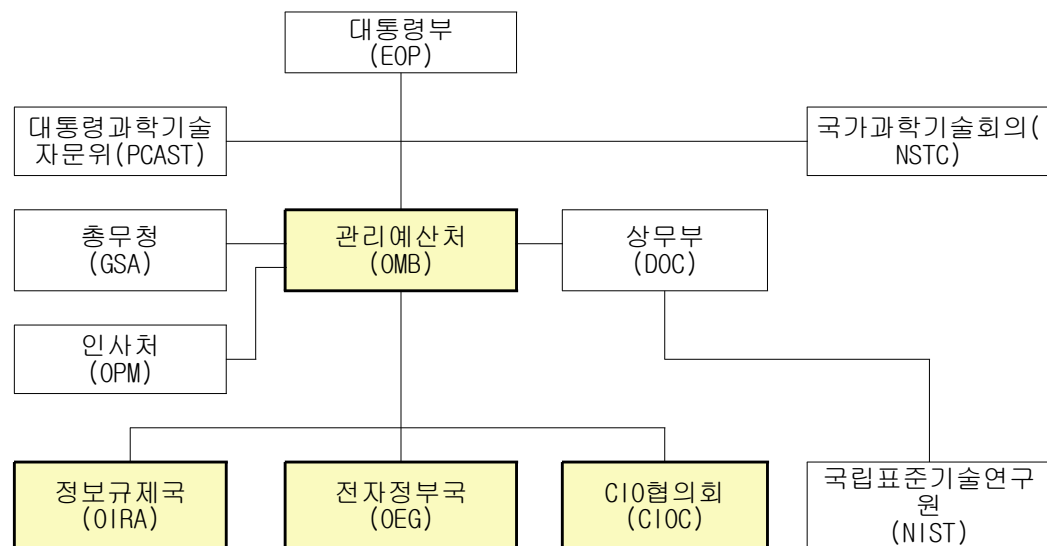
※ OMB내에 정보자원관리와 기관간 협력의 총괄책임기구로 OeG, 연방 EA관리를 위한 FEAPMO(The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Management Office) 등의 전문조직 설치

— 개별부처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총괄하여 배포, 수집 및 분석, 반영하며

## 전자정부 기금사용승인 및 운영상황 의회보고

- 총무처, 상무성 등 그 밖의 기관은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연방 정부에 온라인 서비스 업무 수요를 정의, 민간과 파트너십 형성 지원

### <미국 정보화 추진체계>



### ◎ 정보화 사업은 개별 행정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기획, 집행, 성과 관리 과정으로 진행

- **(투자기획)** OMB에서 일반적 부처 요구사항과 선별적 사항을 구별하여 전달하면, 개별부처가 전략적 기획수립
- **(집행)** OMB와 GAO는 개별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자본계획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기반한 정책 기획 및 관리를 지원
  - ※ 자본계획은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지원 여부 결정의 선정(Select)단계, 추진현황의 점검(Control), 계획 대비 성과 평가(Evaluation)로 구성
- **(성과관리)** 개별부처는 추진과제 수행현황, 성과, 업무과정 변화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OMB에 보고하고 OMB는 이를 의회에 보고, 국민에게는 IT dashboard를 통해 실시간 제공
  - ※ 각 부처 대통령관리아젠다 및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스코어카드에 반영하여 공개
  - ※ 연방조직 27개 기관 7000여개 사업 중 800개의 IT사업별 성과측정을 공개하고, 책임성을 증진

핵심추진과 제도출	⇒	부처조정	⇒	사업수행	⇒	OMB 보고	⇒	의회보고
OMB		CIO 협의회		개별부처		개별부처		OMB

## □ 정보화 정책은 정부개혁 및 민주주의 추진의 일환으로 발전

- ◎ (클린턴 정부) '93년 범정부정보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정보고속도로사업(NII)과 정부개혁사업(NPR)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과 정부 업무효율성 제고를 추진
- ◎ (부시 정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본격 추진
  - 전자정부를 5대 대통령국정의제(PMA)로 채택하여, 2001년부터 시민, 기업 및 정부를 위한 24개 사업을 추진
- ◎ (오바마 정부) 민주주의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참여, 협력, 통제 확대를 구체화한 정부의 부처 및 기관별 중점 추진계획(Open Government Flagship Initiatives) 추진
  - Open Government의 가치는 개별 기관의 업무 추진이 아닌, 의사결정, 문제 해결, 국가 차원의 과제에 참여(Openness)를 통해 수행

### <미국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 발전지수	-	4위	-	2위	-
디지털경제지수	-	-	5위	3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7위	4위	3위	5위	5위
ICT 발전지수(IDI)	17위		17위	19위	-

자료 : 1. 전자정부발전지수 : UN, e-Government Survey, 2008; 2010.  
 2. 디지털경제지수 : EIU, 'Digital economy rankings', 2009-2010.  
 3. 네트워크준비지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2011.  
 4. ICT 발전지수(IDI) :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The ICT Development Index', 2009-2010.

## □ 정보화 추진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 도모

- ◎ 정보화 거버넌스에 있어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리더쉽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합의체간 협력 및 조정체계 구축
  -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쉽과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거버넌스 방식을 활용
  - 정보 활용을 위한 data.gov, spending.gov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新가치 창출을 모색
- ◎ 정보화 정책 추진은 개별 행정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기획, 집행, 성과관리 과정으로 요약
  - 정책은 OMB에 의해 기획과 예산을 연계를 통해 통제되며 개별부처의 독립적 IT 사업은 연방 CIO협의회에 의해 거시적으로 통합
- ◎ 전문성 강화, 조정·협력 메커니즘, 시민참여 증진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정부에 대한 접근성 증진, 신뢰성 확보
  - ※ OeG, FEAPMO 등 전문기구를 통해 정보화 정책 추진의 전문성 확보

## 2. 일본

### □ IT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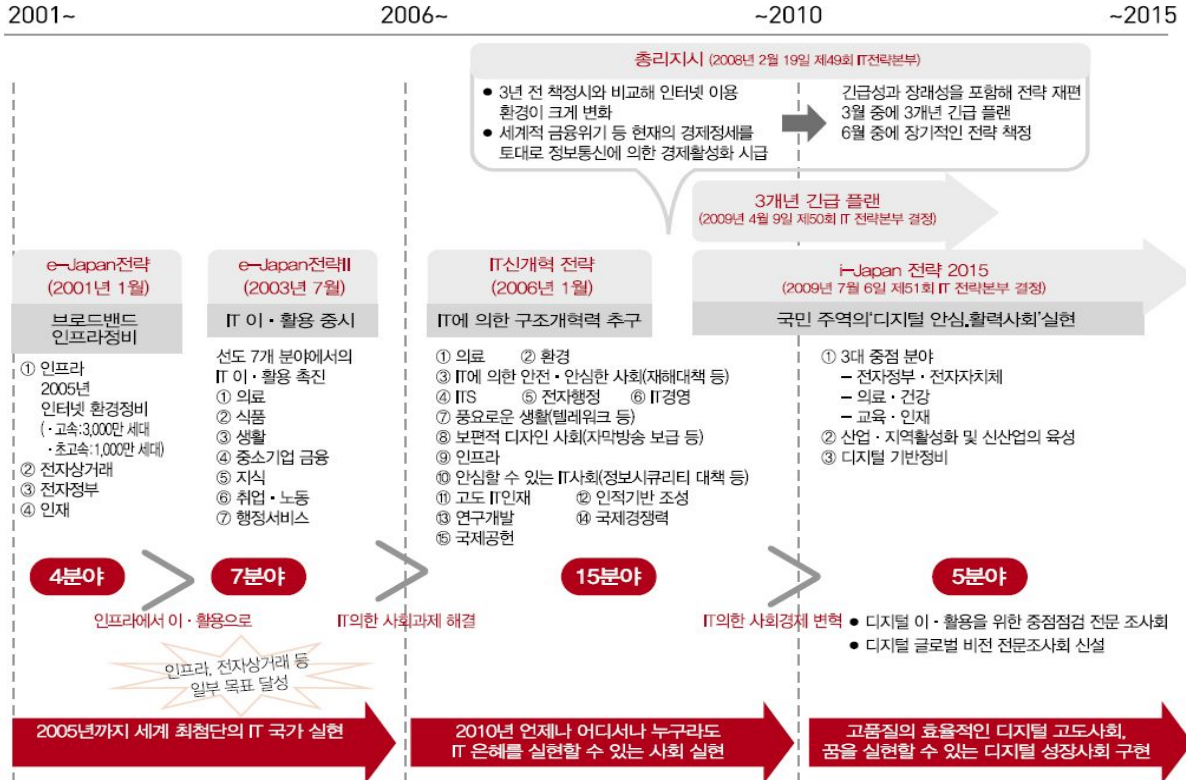
- ◎ 일본 정부의 정보화 추진 핵심기구는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IT 전략본부)
  - IT 전략본부는 정보화 추진의 총괄·조정기구로서, 2001년 내각에 설치되어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전략 추진
  - 정부 조직 내에서 내각부, 내각관방부, 총무성, 경제산업성과 정보화 관련 주요 사업 추진

- ◎ IT 전략본부는 IT 전략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추진은 각 담당 부처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행
  - (사업추진) 부처별 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상이
  - (예산) 정보통신관련예산은 정부 전체로서 일괄 관리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일반예산과 같이 재무성으로의 예산 요구와 사정 작업에 의해 확정
  - (정책평가) 정부 기관의 추진 상황 평가를 위해 IT 전략본부는 2003년 8월 PDCA 사이클을 확립하여 추진
    - ※ PDCA 사이클 : IT전략에 있어서의 계획(Plan)을 실행(DO)하고, 평가(Check)해서 개선(Act)점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살리는 프로세스(현재 IT 전략본부 기획위원회에서 실시)
  - (협의·조정) 각 부처 정보화(CIO) 연락처의 의장이 IT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체적인 조정 등의 정부 CIO 역할 수행
-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를 강력한 전략추진 사령탑의 부재로 인식하고 2012년부터 정부 CIO제도 정식발족 예정
  - 현재 일본의 CIO 역할은 내각부 부대신(현 내각관방부장관)이 수행
  - 향후 도입될 정부 CIO는 정보화 전략에 관한 기획·입안·추진관리와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 전체의 IT 투자예산을 관리하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주도하고 IT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담당할 예정

## □ 세계 최첨단 IT 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 ◎ IT 전략본부에서는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실시할 구체적인 시책을 명시한 「중점계획」을 2001년 이후 매년 발표
  - 통상의 「중점계획」이외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설정하여 정책추진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정책패키지」를 책정 발표
  - 이러한 기본계획과 함께 각 부처에서의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명시한 「행동계획」이 있음

## <일본의 주요 정보화정책 수립 및 추진경과>



자료 : (재)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2009 정보화백서'

- ◎ 정보화전략과 함께 세부 중점계획이 매년 발표되어 추진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져왔으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정보화 관련 주요 국제 정보화 지수에서 중위권 차지

## <일본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발전지수	-	11위	-	11위	
디지털경제지수	-	-	22위	16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14위	19위	17위	21위	19위
ICT발전지수(IDI)	-	-	12위	8위	-

- ◎ 2010년 5월 11일 IT 전략본부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을 결정하여 발표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은 과거의 IT 전략의 연장이 아니며, 새로운 국민주권사회 확립을 위한 3대 중점전략으로 집약
  - 3대 중점전략

-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정부 내의 정보통신기술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국민 본위의 전자행정 실현
-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유대의 재생(의료, 고령화 사회, 교육, 지역활성화와 안전대책을 위한 정보화)
- 신시장의 창출과 국제적 전개

#### □ 국민주권 사회 확립을 위한 전자행정국가 실현

- ◎ 일본은 정보화 관련 정책이 매년 수립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정부의 IT 거버넌스 체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점을 인식
- ◎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나 국민 편의성 증진 등의 기존 IT 전략의 연장선이 아닌 IT의 의미를 새롭게 통찰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일본 정부는 국민본위의 전자행정을 실현하고, 오픈 거버먼트를 지향하여 국민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행정 국가 실현을 목표로, 정부 CIO 제도 도입 검토, '전자행정추진의 기본방침' 책정 등 전자정부의 강력한 추진체제 개혁 착수

### 3. 중국

#### □ 공업신식화부(工業化信息化部) 중심으로 한 정보화 추진

- ◎ 중국은 2001년 정보화 추진 핵심기구로 '국가정보화영도소조(國家信息化領導小組)'를 발족하고, 범국가차원에서 정보화 전략 및 전자정부를 추진
  - ※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조장은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
- ◎ 2008년부터 '공업신식화부'가 '국가정보화영도소조' 업무를 승계하였으며, 4개 부처로 분산되었던 정보화 업무가 공업신식화부로 통합·조정
  - 중국의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업무 총괄



- 중국은 분야별 분업 규제방식인 ‘대분업관제(大分業管制)’ 원칙에 의해, 방송영화산업과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분리

#### <2008년 국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 추진체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G20정보화동향선집(VI), 2010

## □ 정보화와 산업화의 결합을 통한 지속적 성장전략 추진

- ◎ 중국은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적 환경변화 및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IT를 국가발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정보화 추진 도모
- ◎ 중국의 IT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은 장기적 전략인 중국 정보화 프로젝트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단기적 전략(12차 5개년 정보화 계획)으로 구분되어 추진
  - 장기전략(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sup>1)</sup>’이라는 균형성장 및 삶의 질적 개선을 핵심키워드로 하는 중국의 종합적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정보통신 분야의 구체적·실천적 전략
  - 단기전략(125 정보화 규획<sup>2)</sup>) :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7%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2015년까지 정보화 발전을 중진 국가 수준으로 달성을 계획

1) 원래 ‘샤오캉(小康)’이란 중국 고대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사회관으로서 대동(大同)으로 진화하는 전(前) 단계적인 의미를 지칭 ‘전면적샤오캉사회’는 2002년 제6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에서 확정한 국가발전전략 목표로서 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 수준인 4조 4,000억 달러 1인당 GDP 3,000달러를 달성해 전 국민이 잘사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핵심전략

2) ‘계획’은 작업이나 행동에 앞서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인 반면 ‘규획’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미시적·지표적인 수준에서 탈피해 보다 거시적인 국가계획의 변화를 다루는 특징



## <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 전략 목표 및 중점 사업>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會)건설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종합 인프라 구축</li> <li>• IT 기술의 주체적인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li> <li>• IT 산업구조의 전면적 업그레이드</li> <li>•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li> <li>• 국민경제 및 사회정보화 부문에서 명시적 성과</li> <li>• 신흥 산업화 발전 모델 확립</li> <li>• 국가정보화 발전의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정책 시스템 구축</li> <li>• IT 및 정보화 대국민 인식 제고</li> </ul>		
<b>국민경제정보화</b>	<b>전자정부 보급 및 확산</b>	<b>선진 네트워크문화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농(농업, 농촌, 농민)의 정보 서비스 시행</li> <li>• 전통산업구조 개선</li> <li>• 서비스업의 정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li> <li>• 사회관리 정보네트워크 구축</li> <li>• 재정, 금융 등 경제 운영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익한 사회주의 선진 문화 전파</li> <li>• 인터넷을 통한 대외 홍보 및 문화 교류</li> <li>• 건전한 네트워크 문화 형성</li> </ul>
<b>사회 정보화 추진</b>	<b>IT 인프라 구축</b>	<b>정보자원 개발 및 이용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과학 분야의 정보화 추진</li> <li>• 의료, 보건 분야의 정보화 추진</li> <li>• 사회보장 분야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 네트워크 구축</li> <li>• 차세대 네트워크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기초정보은행 구축</li> <li>•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정비</li> <li>• 정보자원의 배분 및 이용강화</li> </ul>
<b>핵심 IT 기술 확보</b>	<b>국가정보보호체계 구축</b>	<b>IT 및 정보화 대국민 인식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IT 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li> <li>• 하이테크 산업 육성</li> <li>• 산·학·연 협력 강화</li> <li>• 기반산업 육성</li> <li>•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개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와 정보보호간 균형 발전 실현</li> <li>• 정보보호 등급제 제정 등 정보보호체계 정비</li> <li>• 독자적 정보보호 수준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IT 응용력 제고 및 기술 교육 확대</li> <li>• 원격교육을 통한 정보화 지식 및 기술 서비스 제공</li> <li>• 전문 정보화 인력 양성</li> </ul>

자료 : 中共中央辦公室·國務院辦公廳, 2006~2020年國家信息化發展戰略, 2006. 5

◎ 중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주도로 전자정부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관련해서 2002년 국무원 제17호 문건인 중국 전자정부 건설에 대한 지도의견(關於中國電子政務建設指導意見)을 발표

— 2006년 3월, 국가정보화영도소조는 국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11.5 기간 동안 중국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 했으며, 2008년 1월에는 중국정부 정보공개 조례를 발표

◎ 중국은 정보화 수준은 아직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중국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발전지수	-	65위	-	72위	-
디지털경제지수	-	-	-	56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	57위	46위	37위	36위
ICT발전지수(IDI)	-	-	73위	79위	-

## □ 중국정부는 ‘전자정부 추진’ 및 ‘인터넷 통제’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 추진

-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지방정부 부패 방지를 위해 중앙의 지방 통제 수단으로 전자정부 추진하며, 또한 국민여론 수렴 통로로 활용
  - 현급(縣級), 시급(市級), 향진(鄉鎮)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로 ‘토지 수용 및 몰수’, ‘주택 철거 및 보상’, ‘보조비의 지불 및 사용현황’ 등을 규정
  - 정무공개 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별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강화, 온라인 업무 처리 확대, 정부의 다양한 공개에 중점을 둠
- ◎ 중국은 중국특색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추진
  -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1위인 중국에서 SNS는 기존 미디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미디어 역할 수행
    - \* 2010년 12월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4억 5천 7백만 명(보급률 34.3%)으로 세계 1위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사용으로 해외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용이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차단(재스민 시위 관련 검색어 차단 등)

## 4. 싱가포르

### □ IDA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및 정보화 관련 정책 추진

- ◎ 싱가포르는 1999년 NCB와 TAS가 현재의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로 통합되어, 전자정부를 포함한 국가정보화를 진행하기 시작
  - 싱가포르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써 전자정부정책위원회(eGPC)를 설치하여 총리가 직접 관리
    - ※ IDA는 20여 명의 민·관·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조직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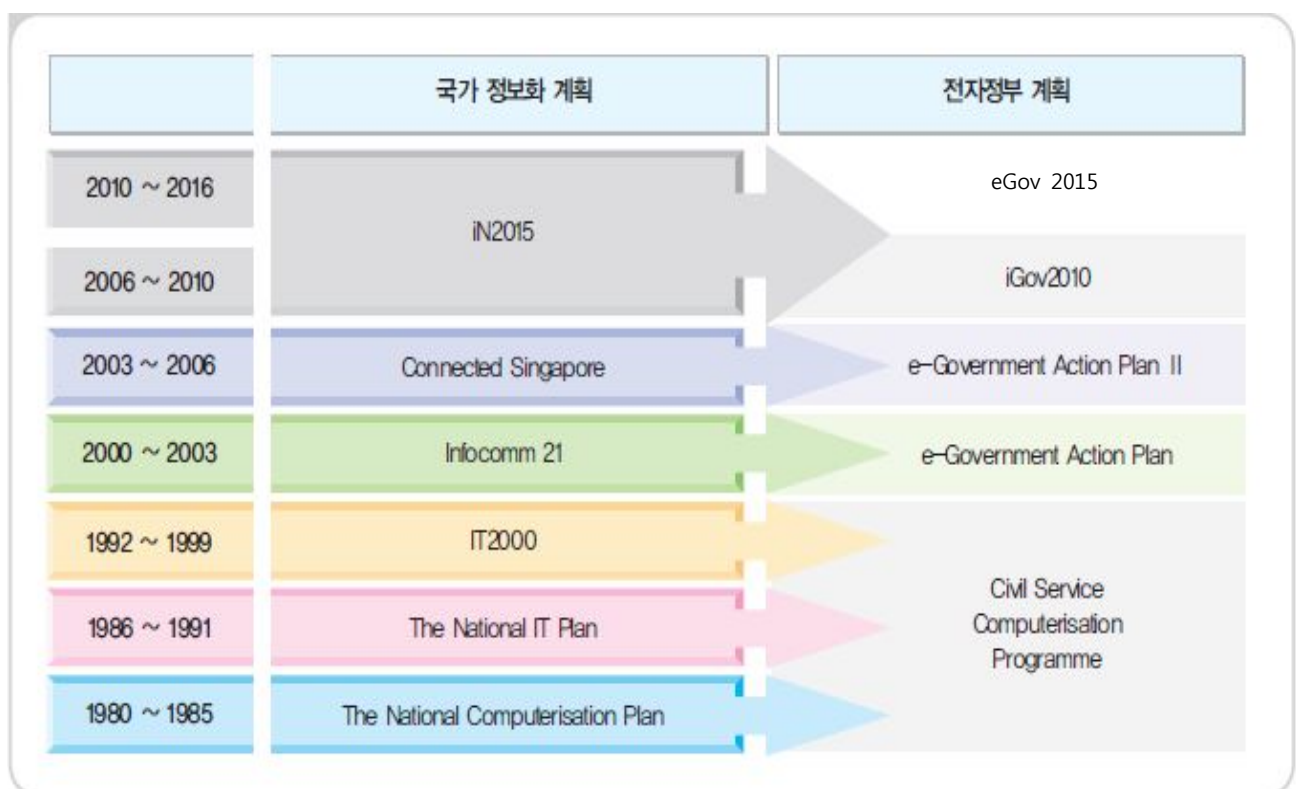
- ◎ 국가차원의 정보화 계획을 통해 중앙집권적 정보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 (운영체제) 국가정보화 총괄은 정보통신문화부(MICA)가, 전자정부 총괄은 재무부(MOF)가 맡는 이원체제 유지
  - (정책추진) IDA가 MOF에 실행계획을 제안하고, MOF가 최종 결정을 내리며 국립컴퓨터시스템(NCS)는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시스템
    - ※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 관리는 IDA 이외의 iGov 협의회와 같은 각종 실무위원회 조직들이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행사
  - (평가) 성과보고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격화된 양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사업평가와 결과의 피드백이 원활
  - (예산) 별도의 정보화 기금이나 전자정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각 부처에서 집행

## □ 동남아시아의 정보화 허브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정책 추진

- ◎ 싱가포르의 인력허브, 비즈니스 허브 등 동남아시아의 정보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1980년부터 정보화 계획을 수립 추진
- ◎ 싱가포르 국가정보화 정책은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보통신계획(iN2015, Infocomm 21 등)과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계획(iGov 2010, e-Government Action Plan 등) 으로 범위를 나누어 정책 수립·추진
  - (추진목표) 국가차원의 정보화 전략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부흥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며, 전자정부계획은 정부 개혁의 수단이자 시민중심의 정부 서비스 실현
- ◎ 싱가포르는 2006년 5월과 6월에 각각 'iGov2010'이라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과 '정보통신 10개년 계획(iN2015)'을 차세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2011년 6월에 iGov2010에 이은 후속 전자정부 계획으로 'eGov 2015'를 발표

- 정보통신 10개년 계획(iN2015 : Intelligent Nation 2015)은 2016년까지 IT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발표한 국가정보화 계획으로 iGov 2010 및 eGov2015와 연계된 방식으로 구축될 예정
- eGov2015(e-Government Masterplan 2011-201)은 ‘국민과 협업하는 정부’를 추진목표로 3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

#### <싱가포르 국가정보화 발전추이 및 전자정부 로드맵>



자료: 류현숙(2009), Web2.0과 컨버전스 환경특성을 반영한 I-Government 구축방안 연구 (재구성)

#### ◎ 각종 정보화 관련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상위에 랭크되고 있음

- 1990년대 인터넷이 부상하였을 때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발 빠른 대처로 인해 ‘네트워크 준비지수, 전자정부 준비지수, ICT 활용’ 면에서 세계 우위를 차지

### <싱가포르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발전지수	-	23위	-	11위	-
디지털경제지수	-	-	7위	8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3위	5위	4위	2위	2위
ICT발전지수(IDI)	-	-	15위	14위	-

## □ 혁신, 통합, 국제화를 위한 국가정보화 및 국민·기업 등 고객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

- ◎ iN2015년 비전에서, 정보통신이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성장을 활성화시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혁신’, ‘통합’, ‘국제화’의 세 가지 주제 선정
  - － 혁신(Innovation) : 혁신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차별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일하기 방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역량
  - － 통합(Integration) : 미래의 성공은 자원 및 가계 사회 조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역량으로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조직, 기업을 연결시키고, 개인과 사회 각 분야, 커뮤니티 등을 연계시키는 교량역할 담당
  -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은 글로벌 시장 참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자 세계 자원 접근, 뛰어난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함
- ◎ eGov 2015 전략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 및 기업 등 고객과 사용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및 사용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를 추진하고자 함

## 5. 호주

### □ 각 영역별 고유의 추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범국가적 협의·조정 체계 마련

- ◎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DBCDE)는 국가 전반적인 통신, 방송, 우정 정책 총괄, 집행
  - 통신시장의 활성화, 우정산업의 정보관리, 온라인 정보보호 등의 업무 중심이며, 기존의 예술과 체육 관련 기능은 이양
    - ※ 200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1999년 설립된 통신정보기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al Technology and Arts, DCITA)의 후신으로 국내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의 우정산업, IT산업 관할 업무 담당
  - 국가브로드밴드네트워크, 방송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주파수 및 스펙트럼, 방송통신 및 콘텐츠 관련 규제 등의 기능 담당
  - 산하로 연방정부기구이자 독립법제기구인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이 설립되어 방송과 통신 규제 단일화
- ◎ 전자정부·공공정보화는 호주정부정보관리실(The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을 통해 재무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DFD)가 담당
  - AGIMO는 재무규제완화부 소속 공공정보화 담당부서이자 정책집행기관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ICT 활용의 효율성 촉진과 실행 전략 제공
  - 정부행정, 정보관리, 정보서비스 부문의 ICT 적용에 있어서의 조정 역할 수행하고,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local), 주(state), 국제기관들과 협조
    - ※ 2004년, 정보경제실(NOIE)의 공공정보화 관련 기능이 AGIMO로 이전
- ◎ 연방기관 간, 주간, 지방정부 간 협력, 조정체계를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협의체 구성, 운영
  - CJCIO(Cross Jurisdic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 Committee) : 관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자정부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하여 OCC에 보고

- ※ OCC(Online and Communications Council)는 재정규제완화부장관,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의장직을 수행하는 장관급 위원회로, 멤버십은 각 주 정부들의 선임 장관 , 그리고 ALGA(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회장에게 부여
- ICT 위원회를 위한 ERC(Expenditure Review Committee's ICT Committee on ICT) : 정부의 ICT 정책과 정책 방향 등을 예산지출 검토를 통해 실행
- SIGB(Secretaries' ICT Governance Board) : 공공·민간의 정보화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호주 정부의 ICT 활용 실행에 대한 검토 및 ERC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ERC의 진척도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 ERC의 정책과 전략적 비전들을 실행, AGIMO의 연례 업무 계획 검토)
- ※ SIGB는 각각 CIOC(Chief Information Officers' Committee), BPTC(Business Process Transformation Committee), CIOF(Chief Information Officers' Forum)등에 의해 지원
- CIOC(Chief Information Officers Committee) : ICT 관련 이슈들을 연구하여 정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후 SIGB에 보고, 또한 SIGB에게서 위탁받은 전략적 ICT 사업을 수행
- ※ CIOC는 중앙 정부, 장관급 부서 등 호주 정부 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s)로 구성(의장직은 호주 정부 CIO가 수행)
- CIOF(Chief Information Officers Forum) : 컨설팅 및 정보 공유 포럼으로 CIOC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기관들의 CIO들로 구성, 소규모 기관의 시각에서 ICT 관련 이슈들의 해결책을 정부에 제공
- ※ CIOF는 호주 정부의 부서, 기관들의 CIO, 그들과 동등한 위치를 지닌 대표자들로 구성

## □ '90년대 후반부터 'ICT 기반의 경제 성장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

- ◎ 지속적 인프라 고도화, 정부서비스에의 ICT 적극 활용, 디지털 경제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호주'로의 실현을 위해 정보화 전략 적극 추진
- 전자정부, 공공정보화 관련 정보화 전략은 AGIMO(또는 전신인 NOIE), DFD를 중심으로 발표, 실행되고 있으며



- 브로드밴드 국가 인프라 확대, 디지털 경제정책 등은 DBCDE가 추진
- 최근 ICT의 활용이 사회 각 영역에 확대되면서 환경수자원부, 전문가 TF 등 다양한 주체가 ICT전략 수립, 시행

<호주의 주요 국가정보화 전략>

추진 전략	주요 내용	비고
Investing for Growth (1997-2001)	정부와 산업 부문의 정보화에 역점 :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국민과 기업의 경쟁력 고취, 주요 사회 부문의 온라인화, 정보 산업 개발 등 4대 목표 추진	Prime Minister's Office (1997)
Government On-Line (2000-2001)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ICT 가치 공유를 위한 8대 정책 부문 추진	DFD (2000)
Better Service, Better Government (2002-2005)	정부 업무/시스템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6대 정책 추진	NOIE (2002)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2004-2006)	사회/경제적 생산성 증가에 따른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요 부문과 ICT 융합 강화 재무, 의료, 교육, 국방 등 주요 부문의 범국가적 효율성 제고	DCITA (2004)
Responsive Government (2006-2010)	국민만족을 위한 정부서비스 진화를 위해 범정부 공통 ICT 전략 본격 추진	AGIMO (2006)
2nd National Broadband Strategy (2007-2009)	브로드밴드의 전국적인 확산과 품질 제고 우선 대상에서 소외지역, 중소기업, 사회 주요 부문 등 전국으로 확산	NOIE (2004)
Digital Economy (2009-현재)	정보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새로운 경제 체계 구현	DBCED (2009)
Engage : Government 2.0 (2009-현재)	참여 기반의 협력지향적이고 개방적인 효율성 높은 정부 구현	Government 2.0 T/F (2009.12)
ICT Sustainability Paln (2010-2015)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사회 기반 마련 : ICT 구매,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 3대 부문 추진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 (2010)
Strategic Vision for the AG's use of ICT(2011~)	미래사회의 선도국을 향한 경제 생산성 중심의 ICT 재활용	AGIMO(2011.4)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분석-호주' 재구성



◎ 정보화 관련 주요 지수에서 호주는 중상위권 유지

<호주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발전지수	-	8위	-	8위	-
디지털경제지수	-	-	6위	9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15위	14위	14위	16위	17위
ICT발전지수(IDI)	-	-	14위	15위	-

□ 전문성과 협력의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략 구사

- ◎ 고유의 추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보 공유, 기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 ◎ 정부운영의 효율성, 인프라 고도화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미래 환경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

## 6.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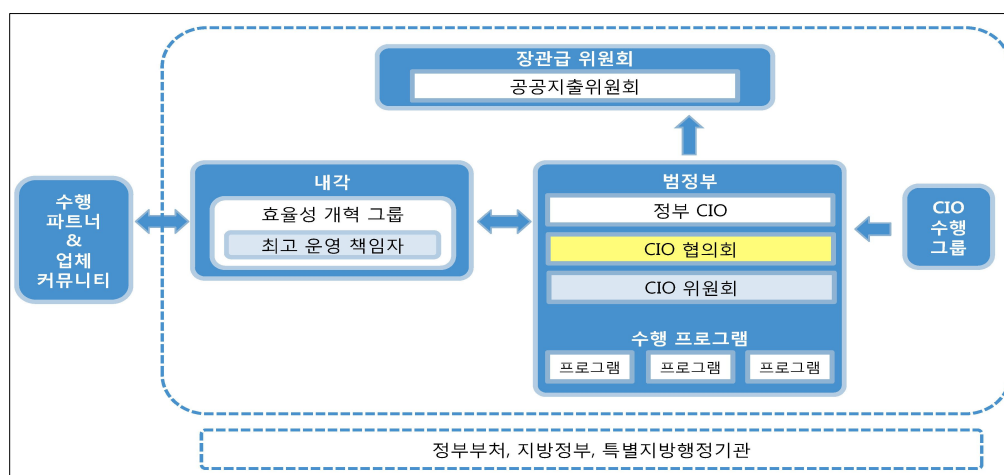
□ 정보화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한정적이었으나, 민·관 협업 등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유럽의 IT 강국으로 발전

- ◎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영국의 정보화 추진 초기 정부의 개입은 규제완화, 교육·의료 등 공공 생활 부문의 IT 활용,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중재에 국한됨
  - 1994년 정보화 추진 초기에는 통산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정보화 정책을 총괄했으나, 정보화가 발전함에 따라 분야별 총괄기구<sup>3)</sup>들이 생겨남

3) 1995년 11월 전자정부 추진 전담기구인 '중앙정보기술단(CITU: Central Information Technology Unit)' 신설. 1999년 9월에는 정부의 정보화 전반을 총괄하는 e-Minister와 전자정부 추진을 총괄하는 e-Government Minister(내각의 장관이 겸직)를 임명하고, 정부 전자상거래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e-Envoy직을 신설. 2000년 1월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인 OeE(Office of e-Envoy) 설립. 2000년 9월에는 CITU를 OeE 내 e-Government team으로 개편

- 2004년 전자정부 관련 재정(예산배정, 투자결정), 정책 기획·개발 등 주요 업무를 e-Envoy에서 내각 내 e-Government Unit으로 이관하여 공공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
- ◎ 21세기 변화된 정보화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발표
  - 영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1년 야심차게 발표한 ‘Government ICT Strategy’의 4대 아젠다 중 하나로 ‘거버넌스 강화’ 표방
  - 내각(Cabinet Office)과 범정부 협의체(Pan Government), 업체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 PEX(ER)<sup>4)</sup>은 공공 부문의 개혁을 위한 ICT의 효율성 특히, 소요 비용을 검토하는 기구로,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위원회
  - ‘정부 CIO(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는 CIO 위원회와 CIO 협의회 등을 지휘·통솔하는 범정부 협의체의 수장으로, 내각 산하의 Efficiency and Reform Group의 지원을 받음
  - CIO 위원회(CIO Delivery Board)는 주요 부처의 CIO들로 구성되어 IT 전략 추진 시 오너십을 가지며, PEX(ER)에 자문을 제공(advise)
  - CIO 협의회(CIO Council)는 IT 전략의 개발·추진을 담당

#### <영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자료 : Cabinet Office, Government ICT Strategy, 2011. 3.

4) Public Expenditure Committee (Efficiency and Reform)

## □ 정부혁신을 위한 도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정보화의 역할 및 가치의 변화

- ◎ 2000년 이전의 정보화 전략은 IT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
  - 영국의 정보화는 1995년 교육·보건 부문에서 시작되어, 1996년 2월 영국의 정보화 전략의 시초격인 ‘Information Society Initiative’ 마련
  - 1998년 4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한,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인 ‘Our Information Age: The Government’s Vision’을 발표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5대 우선과제<sup>5)</sup>에 포함시켜 중점적으로 추진
- ◎ 지식기반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하여 2000년 ‘UK Online’ 정책을 통하여 범국가적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 ① 전 국민에게 인터넷 보급 확산 ② 전자상거래 활성화 ③ 전자정부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2005년까지 모든 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을 위해 노력
  - 특히 전자정부 구축 완료 시기를 2008년에서 2005년으로 단축하고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전략 (e-Government : 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을 2000년 4월 발표·실행
- ◎ 2005년 4월 정보격차 해소와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Connecting the UK : Digital Strategy’을 발표하고, 개인의 IT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 ◎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2009년 1월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sup>6)</sup>’을 발표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 ◎ 카메룬 정부는 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Government ICT Strategy’를 2011년 3월 발표
  - 2010년 5월 집권 이후 공공 부문의 대규모 IT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검토 결과 도출된 정보화 전략으로, 4대 핵심 아젠다<sup>7)</sup> 실현을 위한 30개 프로젝트를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5)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개선, 접근확대, 경쟁촉진, 서비스 향상, 전자정부 구현을 5대 정보화 우선과제로 선정

6) BIS·DCMS, ‘Digital Britain : Final Report’, 2009. 6.

7) ①Reducing waste and project failure, and stimulating economic growth ② Creating a common ICT infrastructure ③Using ICT to enable and deliver change ④Strengthening governance

- ◎ 영국은 정보화 관련 주요 지수에서 중상위권 유지

#### <영국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발전지수	-	10위	-	4위	-
디지털경제지수	-	-	13위	14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9위	12위	15위	13위	15위
ICT발전지수(IDI)	-	-	10위	10위	-

### □ 정보화 초기부터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정부업무혁신 및 전자정부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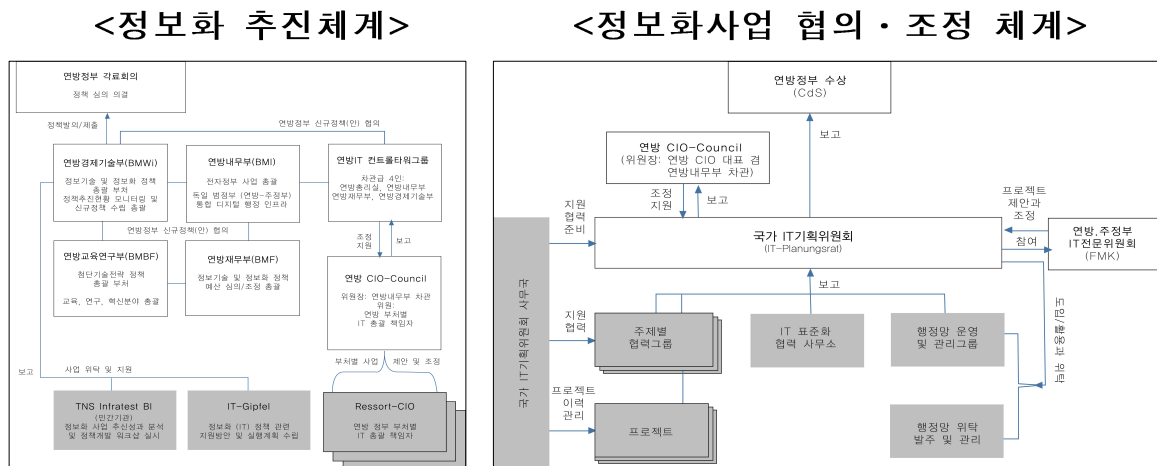
- ◎ 영국의 정보화는 정부의 내각(총리실)의 강력한 주도 하에 산업경제 부분을 총괄하는 통상부와 전자정부를 전담하는 e-Government Unit을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전자정부 발전이 두드러짐
  - IT를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한 1990년대 정보화 초기부터 일관된 정책을 구사하여 정부업무 혁신 및 전자정부 발전이라는 성과를 창출

## 7. 독일

### □ 정책 총괄 거버넌스와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이원화시켜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 정보화 추진 초기에는 연방경제기술부(BMWi)와 차관급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추진
- ◎ 유럽 내 타 국가들에 비해 정보화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2000년대 중반(2005.12) 이후 민·관 기관 간의 광범위한 협업이 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수립
  - **(정책수립)** 정책 총괄 부처인 연방경제기술부(BMWi)와 연방 IT 컨트롤 타워 그룹, 연방 정부 부처들이 협의·발의한 정보화 정책을 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심의·의결

- (예산확보) 연방재무부(BMF)에서 정보기술 및 정보화 정책 관련 예산의 심의·조정을 총괄하고, 2010년 7월부터 Top-down 방식의 예산 편성 모델<sup>8)</sup> 적용
- (성과관리) 정보화 정책 성과분석은 민간 기관(TNS Infratest BI) 및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2011. 5

### ◎ 정보화 사업의 협의·조정은 별도의 추진체계를 통해 진행

-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연방내무부(BMI)를 주축으로 하여, 연방 IT 컨트롤 타워 그룹 - 연방 CIO Council - 국가 IT 기획위원회가 연계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2010년 4월에 신설된 국가 IT 기획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업 협의·조정을 담당하고, 연방정부 IT 대표와 주정부 IT 책임자들로 구성

□ 독일의 정보화는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 :  
(초기) 경제성장 및 실업문제 극복 → (현재) 사회적 당면과제 해결 및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

### ◎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IT 시장을 가진 독일은 1989년 '정보통신기술의 진흥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속하게 정보화에 착수

<sup>8)</sup> 연방재무부에서 개별 부처의 해당연도 총 소요예산을 확정하면, 개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 사업별로 예산을 할당하는 형태

- 정보기술 응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보기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
- ◎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국가정보화 정책을 담은, 독일 최초의 국가정보화 계획 ‘INFO 2000 : 독일의 정보사회로 가는 길’을 1996년 2월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추진
  - 독일 정부는 IT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정보화 및 정보산업 육성을 통하여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유도
  - 교육·환경·교통 등에 IT를 접목시켜 응용 분야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정보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IT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임
- ◎ 1999년 2월 독일 정부는 ‘21세기 정보사회의 혁신과 고용’<sup>9)</sup>이라는 정보화 정책을 제시하고, 유럽 내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치 선점을 위하여 노력
  - 정보화를 통해 현안(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해결을 모색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구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확산, 학교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정부 현대화) 등에 16억 2,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디지털 독일을 위한 기반 구축
- ◎ 1996~2003년까지의 정보화 추진성과를 분석·보완하여 ‘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06’을 2003년 12월 발표
  - 6대 핵심목표<sup>10)</sup> 중 디지털 경제 부문의 지속적인 추진은 앞선 정보화 정책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보건정보화는 기존의 고용(노동)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판단
  - 전자정부 부문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전자정부 사업인 ‘Deutschland Online’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간 조정의 어려움과 재정부족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9) Innovation und Arbeitsplätz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es 21. Jahrhunderts: Aktionsprogramm der Bundesregierung

10) 디지털경제, 연구와 기술 발전, 교육, 전자정부, 전자카드(e-Card) 이니셔티브/전자인증제, 보건정보화(e-Health), IT-안전

- ◎ 2006년 11월 ‘iD2010 - 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10’을 발표하여 기존의 정보화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여 추진
  - ① 정보사회를 위한 법적 기술적 프레임워크의 개선 ② 국민과 정부의 정보사회로의 통합 강화 ③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④ IT 연구 및 투자를 통한 혁신 촉진 등을 중심으로 추진
  - 한편, 업그레이드 된 전자정부 추진전략인 ‘전자정부 20 프로그램(2006. 9)’을 통해 IT를 통한 공공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 ‘ICT Strateg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Digital Germany 2015’는 2010년 11월 발표되어 현재 추진 중인 독일의 IT 전략
  - 디지털 미래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IT를 사회 현안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
- ◎ 독일은 정보화 관련 주요 지수에서 중상위권 유지

**<독일의 정보화 수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자정부발전지수	-	22위	-	15위	-
디지털경제지수	-	-	17위	18위	-
네트워크준비지수	16위	16위	20위	14위	13위
ICT발전지수(IDI)	-	-	13위	13위	-

**□ 정보화를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견인**

- ◎ 정보화를 사회 현안 해결의 솔루션 활용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
  - 유럽 내 타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정보화를 시작하였으나,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지 않고, 정보화 추진 초창기부터 사회 현안과 결부시켜 정책을 수립·추진
  - 각 부문별 국가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정보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고른 성장을 유도
- ◎ 민·관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3.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특성 및 시사점

- ◎ 각국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각각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추진체계의 모습은 다르나, 정보화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총체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은 동일
  - 각국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보화추진체계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및 사회변화 속도에 연동하는 정보화 정책의 특성상 당연
- ◎ 정보기술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장기 전략과 단기 행동계획을 대통령과 수상 등 국정최고책임자가 정보화를 국정의제로 인식하고 대통령부와 내각사무처/내각관방 등을 통하여 직접 관장
  - 동시에 정보화 추진을 위한 별도의 추진조직체계 완비함으로서 정보화 추진의 가속도
    - ※ 미국 대통령부, 일본의 IT전략본부(수상이 본부장), 영국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산하 전자정부단(EGU, e-Government Unit) 등
- ◎ 싱가포르의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호주의 AGIMO(The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미국의 OeG(Office of e-Government) 등 전문성을 가진 정보화 전문기관이 중요 역할 수행
  - 전통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전문성을 가진 별도 전문기관의 전문성 활용
    - ※ 미국의 OMB-OeG, 호주의 DFD-AGIMO 등
- ◎ 초기 인프라나 하드웨어 중심의 범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에서 최근 임무영역지원, 즉 부처별 서비스 개발과 운영 중심의 전문화 된 정책수립으로 진화
  - 인프라, 물리적 구축 중심의 전략보다는 사회복지, 교육 등 대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발전
  - 정보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 및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관리방식 도모



◎ 단위부처 중심에서 여러 기관 및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 추진이 증가하면서 정보화 거버넌스는 협력, 조정체계가 핵심

— 하드웨어 구축 단계에서는 단위부처 중심의 정책추진이 가능하나, 서비스 보급 확산에서는 여러 부처 관련 정책이 핵심

※ 호주의 SIGB, OOC, CIOOC, 일본의 IT전략본부, 싱가포르의 iGov, 영국의 내각사무처 등

### <주요국의 정보화 정책 추진의 특성>

국가	추진체계	주요정책	특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력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합의체간 협력 조정체계 구축, 국민소통참여 채널 확보로 발전</li> <li>정책기획 및 집행은 OMB에 의해 예산 연계를 통해 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개혁 및 민주주의 추진의 일환으로 발전</li> <li>초기 인프라 구축에서 전자정부 추진, 최근 투명성·참여·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력한 리더십과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거버넌스 방식을 활용</li> <li>정부효율성 뿐만 아니라 투명성 및 국민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IT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추진은 각 담당 부처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행</li> <li>예산은 전체로써 일괄 관리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일반예산과 같이 예산요구와 사정작업에 의해 확정</li> <li>PDOA 사이클 확립을 통한 사업추진상황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첨단 IT 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화 정책을 200년 이후 매년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Japan 전략 e-Japan 전략 II, IT 신개혁 전략, I-Japan 2015 등</li> </ul> </li> <li>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기존 IT 전략의 연장선이 아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 정보통신기술 전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보화를 추진해 왔지만,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통제 기능 등 강력한 IT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원인으로 지적</li> </ul> </li> <li>기존 전략의 연장선이 아닌 IT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국민본위의 전자정부 실현과 강력한 IT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 변경</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신식화부(工業化信息化部) 중심의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분업관계 원칙에 의해 방송영화산업과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분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를 국가발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정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 전략인 중국 정보화 프로젝트(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와 단기전략(12차 5개년 정보화계획)으로 구분되어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화와 산업화의 결합을 통한 지속적 성장 전략 추진</li> <li>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지방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통제수단으로 전자정부 추진</li> <li>중국 특색의 ‘인터넷 통제 정책’ 추진</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A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화 총괄과 전자정부 총괄 부처를 이원화하여 사업 추진</li> <li>-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블록예산시스템을 공공에 반영시켜, 효율성 증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부터 동남아시아의 정보화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정책 수립·추진</li> <li>- 국가차원의 정보통신 계획(IN2015 등)과 정부차원의 정보통신계획(e-Gov 2015 등)으로 범위를 나누어 정책 수립·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차원의 정보화 계획을 통해 중앙집권적 정보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정부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li> <li>· 국가정보화 프레임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파트너십 활발</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영역별 고유의 추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범국가적 협의 조정 체계 마련</li> <li>· 방송통신 IT산업은 DBCDE 중심으로, 공공 정보화는 DFD·AGIMO 중심으로 추진</li> <li>· SIGB, CIOC, CJCIOC 등 다양한 협의 조정체계 완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대 후반부터 'ICT 기반의 경제 성장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li> <li>· 지속적 인프라 고도화, 정부서비스에의 ICT 적극 활용,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호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화 전략 적극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과 협력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전략 구사</li> <li>· 고유의 추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li> <li>· 정부운영의 효율성, 인프라 고도화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미래 환경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강화</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정보화 추진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으나, IT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범부처적 추진 체계로 재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초기에는 IT를 정부혁신의 도구로 활용, 21세기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내각사무처) 중심의 강력한 정부 주도로 정부업무 혁신 및 전자정부 발전이 두드러짐</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총괄 거버넌스와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이원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를 현안 해결의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경제성장 견인 및 실업문제 극복</li> <li>- (현재) 삶의 질 향상 및 공공행정 프로세스 개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창기부터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회 현안과 결부시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의 고른 성장을 유도</li> </ul>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 1 한국정보화진흥원, G20 정보화 동향 선집, 2010.10.
- 2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 포커스, 2006.9
- 3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② - 호주, 2011.5
- 4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국의 정보화 거버넌스 현황, 2011.6
- 5 정연정, 미국에서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추이와 추진체계 특징:전자정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4): 197-216. 2009
- 6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2009. 7.
- 7 한국전산원. 독일의 정보사회로 가는 길, 1996. 2.
- 8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③ - 영국, 2011.6.
- 9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1997-2010)

### 국외 문헌

---

-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8). Reauthorization of the E-Government Act: A Brief Overview. by Jeffrey W. Seifert.
- 2 Darrell M. West. (2008). Governance Studies; State and Federal Electronic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Institution.
- 3 Donald Norris. (2008). E-Government Research; Policy and Management. IGI Global.
- 4 OMB. (2009). Expanding E-Government Achieving Results for the American People.
- 5 OMB. (2010). Circular A-11. Sec 53. Information Technology and E-Government.
- 6 OMB. (2011). Terminations, Reductions, and, Saving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7 Cabinet Office. (2011). Government ICT Strategy.
- 8 Cabinet Office. (2005). Transformational Government Enabled by Technology.
- 9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BMWi). (2010). ICT Strateg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Digital Germany 2015

## 웹 사이트 및 기타

---

- 1 미국 OMB : [www.whitehouse.gov/omb/](http://www.whitehouse.gov/omb/)
- 2 일본 IT 전략본부 : [www.kantei.go.jp/jp/singi/it2/](http://www.kantei.go.jp/jp/singi/it2/)
- 3 일본 총무성 : [www.soumu.go.jp](http://www.soumu.go.jp)
- 4 일본 경제산업성 : [www.meti.go.jp](http://www.meti.go.jp)
- 5 중국 공업신식화부 : [www.miit.gov.cn](http://www.miit.gov.cn)
- 6 싱가포르 IDA : [www.ida.gov.sg](http://www.ida.gov.sg)
- 7 호주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경제부 : [www.dbcde.gov.au](http://www.dbcde.gov.au)
- 8 호주 재무규제완화부 : [www.finance.gov.au](http://www.finance.gov.au)
- 9 호주 통계청 : [www.abs.gov.au](http://www.abs.gov.au)

## IT&Society 과월호 목록

2011

- Vol.1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① - 핀란드
- Vol.2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 선진사례 분석
- Vol.3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② - 호주
- Vol.4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新 국가정보화전략 분석 ③ - 영국

- 
1. “IT&Society”는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2. “IT&Society”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최신 정보화 트렌드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입안자 등에게 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3.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본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김현경 책임연구원([ksbs1801@nia.or.kr](mailto:ksbs1801@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한영미 책임연구원([ymhan@nia.or.kr](mailto:ymhan@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김진숙 책임연구원([jskim@nia.or.kr](mailto:jskim@nia.or.kr))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itglobal.or.kr](http://www.itglobal.or.kr)